

공약에... 당론에... 소신에... 짝 막힌 은산분리 규제완화

최종구가 총대 메고, 대통령까지 나서... 겨우 풀렸다

(금융위원장)

현재의 제도 신산업 성장 억제
대원칙 아래 운신 폭 넓혀줘야
금융권 전체의 경쟁·혁신 촉진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의 대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목하면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참석해 "지금의 제도(은산분리 원칙)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늦은 것은 물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국회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최 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 '답답하다'던 대통령 직접 나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하며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가 없었던 데 대한 질타였다.

특히 이번 정부의 규제혁신은 금융산업을 주목했다. 금융사들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의 혜택은 누리면서 그에 걸맞은 역할이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단순히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사간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네번째)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따라서 이번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시연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현장방문 장소 역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휴식하는 시민청을 택해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은산분리 완화, 공약 파기 아냐"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위한 분위기는 이미 조성됐다.

최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설득작업을 시작했고, 당론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했던 여당 역시 규제완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일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문 대통령의 금산분리 공약파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산분리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누구든 못 들어가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물론 대통령까지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발벗고 나섰다지만 법안통과를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은산분

리 완화에 대해 재벌의 사금고화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참여연대와 정의당은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기조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

〈발의 법안별 주요내용 비교〉

구분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개정안)		
	강석진책	김용태책	정재호책	김관영책	유익동책
지분보유한도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의결권 있는 주식의 34%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적용 제외	개인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	개인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
대주주 신용공여	-	금지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금지	자기자본의 10%한도
대주주 발행증권 취득	-	-	-	-	-

/자료=금융위

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

가 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다. 비금융사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재벌 사금고로 전략 우려”

규제완화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민의 예금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략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추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감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면 재벌의 입금이 센 현실에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2013년 터진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며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없다면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해 은행산업에 지배력이 옮겨가고, 은행업을 이용한 불공정한 경쟁등이 심화돼 산업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쟁력도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별다른 사회적 편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했지만 카카오뱅크는 6.8조원의 대출잔액을 유지한 반면 케이뱅크는 약 1.3조원의 대출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에서 급속 성장했는데 케이뱅크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은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사례에서 보인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5@

BMW Korea



BMW를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화재로 인해 BMW 고객님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당국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를 겪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BMW 본사에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경영진이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BMW 차량 전문가로 구성된 다국적 프로젝트 팀 1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BMW 코리아 및 관련 파트너사 등과 함께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BMW 그룹은 한국 고객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전 안전 진단과 자발적 리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BMW 코리아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본사 기술 부문 최고 책임자들로 하여금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EGR 쿨러의 냉각수 누수 현상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누수 현상만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주행거리, 속도 및 주행시간, EGR 바이패스가 열리는 상황 등 제한 조건이 한꺼번에 충족하였을 때 비로소 화재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은 한국과 전 세계가 비슷한 비율이지만 한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더 면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BMW 코리아는 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검증단을 구성해서 독일 본사를 방문하고, 사고의 유형을 정리해서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과정에 대한 모든 기술적 정보를 정부 당국에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고객님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또한 약속드리겠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의 고객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속한 진단을 위해 전국 61개 서비스 센터 및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를 24시간 운영하여 일일 약 1만여 명의 안전 진단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즉각 점검을 받지 못하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요청 시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렌터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센터에서 렌터카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BMW 코리아 및 BMW 공식 딜러사는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여 고객님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엠더블유코리아 (주) 임직원 일동

대상차종 확인 및 서비스 안내

1. 리콜 대상 차량 확인

- BMW 코리아 홈페이지 리콜 대상 차량 조회 서비스
www.bmw.co.kr/ko/topics/owners/bmw-recall.html
- 전국 BMW 공식 서비스 센터
-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
- 국토부 자동차 리콜 신고 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jsp/recall/recallSearch.jsp

2.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 및 리콜 서비스 예약처

- 전국 BMW 공식 서비스 센터
: 평일 및 주말, 24시간
- 리콜 전담 고객 센터(080-269-5181)
: 평일 및 주말, 24시간
- BMW Plus 애플리케이션(리콜 예약만 가능)